



# 의료계 현안과 새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

宋 在 聖

(保健福祉部 保健政策局長)

## I. 保健醫療 環境 및 實態

### 1. 經濟社會的 周邊環境 與件의 變化

- 경제여건의 변화
  - IMF의 지원하에서 우리나라는 근래에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불황에 돌입
  - 향후 경제여건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개혁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크게 의존
  - 최근 IMF의 발표에 의하면 '98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-0.8%, 물가상승률은 10.5%로 매우 어려울 전망
  - 재정여건도 악화되어 보건복지부의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3조 2,315억원에서 추경을 통해 5.7% 감소
- 지방자치제의 실시등 정치환경의 민주화
  - '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본격화
  - 보건, 복지, 환경등에 대한 주민욕구 표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간의 체계적인 역할분담체계 구축 필요

### 2. 保健醫療制度 및 政策의 變化

- 의료보험제도의 통합
  - 『노사정위원회』 및 『대통령직인수위원회』에서 '98년중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키로 결정
  - 통합방안 수립을 위하여 『의료보험 통합추진기획단』 구성(3.23)
  - 지난 정기국회에서 『국민의료보험법』이 통과, '97.12.31 공포됨에 따라 '98.10월 시행 예정
  - 지역조합과 공·교공단을 통합하여 『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』을 설립·운영하되, 재정은 구분계리
- 의약분업의 실시 및 의약품 가격·유통 질서 개선
  - '94년 개정된 약사법은 의약분업을 '99년7월까지 실시토록 규정
  - '97년 총리주재 규제개혁추진위원회 의에서는 의약품의 가격 및 유통질서를 개선토록 의결

### 3. 人口 및 疾病構造의 變化로 인한 保健醫療需要의 增大

- 인구의 성장률은 안정적인 추세를 유

지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인구와 장애인·정신질환자 등 보건취약계층의 빠른 증가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

- 노인인구 비율: '85년 4.3% → '97년 6.3% → 2020년 13.1%

- 장애인 수: '85년 915천명 → '95년 1,053천명

○ 만성퇴행성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만성퇴행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식생활과 흡연, 음주 등 건강위해 요인 상존 → 적극적·사전예방적 국가 보건전략 수립 필요

#### 4. 國民醫療費의 급격한 增加

○ 질병양상의 변화와 의료욕구의 증대로 국민의료비 급증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질병예방사업 및 비용절감형 의료서비스 확대 필요

- 국민의료비 '85 → '95  
(GNP대비) 3조 8,177억원 21조 9,371억원  
(4.8%) (5.8%)

#### 5. 保健醫療行政體系 및 法體系

○ 현행 보건의료행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와 법령체계는 전염병관리·사후치료를 중점을 두고 공급자 위주로 구성되어 국민들의 새로운 보건의료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

- 새로운 의료수요에 부응한 적극적·사전예방적 행정조직 및 서비스전달체계 구축 필요

-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역할 재정

립 필요

- 이를 위해 보건의료법령체계의 근본적 골격 전환 필요

#### 6. 保健醫療 科學技術 水準의 發展

○ 의약품, 생명공학, 의료기기, 식품 등 보건의료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21세기 국가경제성장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되나,

- 우리나라 기반기술수준이 취약하여 주요기술의 수입의존도가 심화하고 있으며, 선진국간 배타적 기술독점으로 기술개발의 어려움 심화

→ '95년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공포, 산·학·연·관간 공동연구의 촉진 등 연구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추진중

#### 7. 保健醫療서비스市場 開放

○ UR협상, WTO출범이후 상품은 물론 서비스 분야에서도 국가간 자유이동을 확대하여 세계가 완전자유경쟁시대에 돌입

→ 보건의료산업분야에서도 세계경제 질서의 흐름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새로운 생존전략과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

## II. 1998年度 保健醫療分野 基本政策方向

### 1. 目 標

○ 보건의료의 효율성 제고 및 질적 향상

을 통해 모든 국민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충족

## 2. 基本政策方向

- 국민건강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를 선진화
  -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통해 기초보건의료수요의 충족도 제고
  -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소비자 욕구에 맞는 효율적인 보건의료 공급체계 구축
- 의료이용 관행 및 유통체계의 근본적 전환
  - 의료인과 약사의 적정 역할 분담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
  - 시장경제체제에 걸맞는 합리적인 의약품 가격 및 유통구조 구축
- 보건의료산업을 성장선도산업으로 집중 육성추진
  - 기술개발 촉진 및 투자확대
  - 보건의료관련 행정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여 기업의 창의성·자율성을 보장

중 배정

- 신약개발 시설자금 자금을 2001년까지 2,600억원 용자('98:재특 320억원)
- 당초 2006년 완공계획인 276만평 규모의 『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』를 앞당겨 조성
  - 보건의료 연구기관(정부, 민간), 생산시설 및 대학 등이 결합된 Science Park로 육성(토지공사가 개발 실시계획 수립중)
  - 단지의 일정규모를 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
- 중소병원을 경쟁력 있는 전문병원(노인치매·정신병원 등)으로 기능전환 유도(재특 300억원, 농특 200억원 활용)
- 2000년까지 총 20개소의 의약품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물류비용 절감
- 한방을 이용한 중풍, 치매 등 난치성질환 치료기술 개발 지원 『2010 Project』 및 『한방의료임상센터』 건립

## 2. 經濟難 관련 保健醫療分野 適正 需給 對策 마련

### □ 주요 동향 및 주요 조치사항

- 그동안 환율급등 등의 영향으로 의료기관의 휴·폐업, 제약업체 및 의약품 도매업소의 도산이 늘고 있으며,
  - 수입원자재의 가격상승에 따른 원료 의약품 및 의료용구, 진료용재료대 등의 공급이 부분적으로 불안정
- ※ IMF이후 병·의원 휴·폐업이 '97년 대비 약 60% 증가, 영진약품 등 8개 제약회사, 16개 도매업소가 도산
- 우리부는 '97. 12월 보건의료분야 보

## III. 1998年度 主要 保健醫療施策

### 1. 保健醫療産業의 育成對策

- 기술선진화를 위하여 2010년까지 총 1조 6,400억원의 기술 개발 연구비 투자('95-'97: 813억원, '98: 500억원)
  -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비를 집

건의료계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특별 조치방안 마련

-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 제도 개선
  - 청구금액의 80%를 우선 지급하는 의료보험진료비 개선불 지급제도 실시로 지급기간을 대폭 단축
  - 의료보호체불진료비(1,201)를 1/4분 기중 조기배정 조치

○ 일부 보험약가 및 진료용 재료에 대한 의료보험수가 현실화

- X선 필름 및 CT 필름에 대해 월단 위 환율연동제 적용('98.1월부터)
- 보험약가 등재 의약품 12,663품목중 2,7721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 12.8% 인상('98.2월부터)
- 재료대가 별도로 지급되는 인공고관절 등 1,900여종의 의료용구에 대한 보상가를 약 25-50% 인상('98.2월부터)

○ 의료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보험약가 등재횟수를 현행 년 2회에서 월1회로 조정하여 등재횟수를 대폭 확대

#### □ 향후 조치계획

- 의료보험 진료비 상환액 개선불 확대
  - 의료기관 등의 단기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보험 진료비 개선불제도 확대 추진(지급대상확대 및 지급액 상향조정)
-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추진
  - 의료기관 붕괴시 진료차질, 재건의 어려움 등 사회적 파장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단기자금 특별금융지원 실시 적극 검토
- 의료보험수가 인상

- '98 의료보험 수가 인상시기를 앞당겨 시행(인상률보다 시기가 중)

- 원료비의 상승 등으로 인한 공급부족으로 진료차질이 우려되는 의약품·재료대 등은 원가분석 후 인상요인을 수가에 적기 반영
  - 대상: 수액제, 진료재료 및 의료용 소모품 등

#### ○ 규제완화

-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
  - 종합병원, 병원·의원 등 의료기관 중별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
  - 우선 병원급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시설·인력 기준의 완화

### 3. 『21世紀 保健醫療發展 綜合計劃』 樹立 推進

#### □ 계획수립의 목적 및 기본방향

##### ○ 목 적

- 21세기 보건의료발전 기본방향과 세부실행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성을 확보하고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과 국가경쟁력 제고 도모

##### ○ 기본방향

- 중·장기적인 경제사회발전 수준, 국가 재정능력 등 보건의료를 둘러싼 주변 여건과 국민보건의료 수요의 변화양상에 대한 예측을 통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수급 기본모형을 제시
- 국민건강 수명의 연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경제사회발전 수

준에 맞는 국민보건기본모형을 제시

○ 주요내용

- 보건의료분야에서의 국가의 책임과 의무, 저우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등의 기본틀 정립
-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대전환, 병·의원 등 보건의료기관에 경영개념의 도입, 규제중심 관리행정에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지원행정으로의 전환, 보건의료산업의 21세기 첨단생명자원산업으로의 육성방안 등 포함
- 양중심에서 질중심으로 급속히 전환되어 가고 있는 국민보건의료욕구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의료보험통합 등 관련제도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적극적으로 국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구체적 실천전략 수립

○ 추진일정

- '98년 상반기까지 초안 작성,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

4. 保健醫療關聯 制度 改善 推進

국민의료이용 편의 도모, 국민의료비 절감, 의약품 오·남용 방지 등을 위해 의·약제도의 근본적 개선

- 병·의원간 의료전달체계 확립, 만성질환자를 위한 가정간호사업 실시, 고가 의료장비 공동활용 등을 적극 추진
- 의료사고 환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과 응급환자의 후송·치료체계 확립

- 의사와 약사간의 역할분담과 의약품 오·남용 방지를 위하여 '99. 7월까지 실시 예정인 의약분업 준비

- 소비자 및 전문가 등으로 『의약분업추진협의회』를 구성, 우리실정에 맞는 의약분업 실시방안을 금년중 결정

- 안전성이 확보된 단순의약품을 '99.7월부터 약국아닌 장소에서 판매를 허용하고, 의약품 가격제도를 개선

- 의·약 전문가로 『의약품분류위원회』를 구성하여 연말까지 단순의약품 범위 설정

- 표준소매가격제도를 최종 판매자 가격표시제도로 전환

5. 保健醫療分野의 國際 및 南北交流 擴大

- WHO 등 국제기구에 보건의료전문가의 적극 진출로 보건의료분야 외교강화 및 인류건강증진 기여

- 의료장비, 의료기술 등 보건의료산업분야의 세계시장 진출 계기 마련

- 중국, 몽골, 우즈베키스탄 등에 민간차원의 의료협력 및 진료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재외 한민족 보건의료지원 강화

- 남북간 보건의료인력 교류 및 인도적 차원의 의료지원 활성화

- 공동 학술회의, 양·한방 병원 건립, 한약재 가공공장 설립, 기초의약품 지원 등